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현 신임 위원장

문화예술 공공성 위한 최선의 방법, ‘나눔과 소통’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문화관광부는 지난 9월 7일 김정현(61)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제2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 전국민족미술인연합 공동의장, 문화연대 상임대표 등을 지낸 현실 참여적 화가인 그가 문예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일부 언론은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현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의 예술 지원이 좌파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예단에 대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색깔을 입혀 한쪽

으로 몰고 간다”며 “앞으로 일하는 과정을 통해 그런 비난이 결국 억지였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으로 3년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문예위 수장으로 활동하게 될 김 위원장을 만나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포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자신에게 따라붙는 ‘민중미술 1세대’라는 호칭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나는 문화예술 운동을 했을 뿐이지 민중미술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공성은 문화예술의 기본입니다. 문화예술에 있어 나눔의 기술, 소통의 기술에 대한 고민은 공공성을 확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우리나라 문화예술은 이 소통과 나눔의 관계가 작가 중심으로 일방적이고 편향적입니다. 애초에 저 자신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문화예술 운동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그의 신념은 문예위의 당면과제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2년 전 민간자율기구로 출범한 문예위가 사업구조나 의사 결정 방식에 있어 진흥원 시절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진흥원 시절 5천억 원에 이르던 기금이 지금은 4천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기금 확보는 기본적이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 문예위의 의사결정 방식이 11인 분과별 위원장 합의제로 바뀌면서 생겨나는 문제와 위원회와 사무처 간의 원활하지 않은 소통 문제도 있습니다.”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영역을 대상으로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금을 분배해서 지원하는 것이 문예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김 위원장은 이 지원과 기금의 분배의 방식에 있어 몇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문예위 출범 당시부터 공모를 통한 ‘소액다각’ 식의 지원에서 기획 발굴이나 상담을 통한 ‘집중과 선택’ 식의 지원으로 변해야한다고 얘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업구조는 여전히 소액다각식입니다. 앞으로 ‘지원컨설팅센터’를 만들고 직원들을 ‘상담 전문 인력’으로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개혁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컨설팅센터는 만들어졌지만 센터 운영을 위한 재원과 상담 전문 인력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이 센터가 ‘공문’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이 아닌 ‘상담’을 통한 직접적이고 세밀한 창작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